

## 일반논문

# 1960년대 재일상공인의 모국투자와 공업단지 형성 구로, 마산, 구미의 사례 비교\*

Homeland Investment by Ethnic Korean Entrepreneurs in Japan  
and the Formation of Industrial Complex in 1960's Korea:  
Focusing on the cases of Guro, Masan and Gumi

김백영\*\*

재일상공인들의 모국투자가 1960~19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당시 교포자본의 모국투자는 '이윤 추구'와 '인정 투쟁'이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었기에 개인별·사례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 구체적 전개 양상을 1960년대 구로, 마산, 구미 지역 공업단지 개발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살펴해보았다. 구로공단이 중앙정부 주도의 교포자본 전용 수출자유공단으로 수도권에 조성되었음에 비해, 지방에 조성된 마산공단과 구미공단은 형성 초기 재일상공인들과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마산과 구미 사례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공단 개발의 전개 양상에서 양자는 상당히 대조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북한지역 출신 손달원을 핵심 당사자로 하는 마산기계공단 건설계획은 장기간의 협상 끝에 결국 계획이 좌절되고 유보되고 변경된 데 비해, 경북지역 출신 곽태석과 이원만에 의해 주도된 구미공단 건설계획은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급속도로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공단개발의 지역별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는 ① 1960년대 재일상공인들의 모국투자와 공단개발 참여는 사회적 실천이 가변적인 정치적 상황과 지역적 맥락에 따라 사회적으로 수용되거나 굴절되고 거부되었다는 점, ② 그 과정에서 재일상공인들이 중앙정부나 지역사회와 맺는 사회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 이는 곧잘 '애국'과 '애향'이라는 담론적 장치를 통해 표출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재일교포(재일동포), 재일상공인, 모국투자, 공업단지, 발전국가

\* 이 연구는 (財)이희건한일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부족한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 익명의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수(kimby@kw.ac.kr)

僑胞實業家들은 美國의 借款, 西獨의 借款, 在日僑胞의 投資 등 세 가지를 比較할 때 어느 것이 가장 효과 있게 韓國을 工業化할 것인가를 深思熟考해 주기 바란다고 主張하고 있었다. 미국이 수익 불을 꾸어준다든가 또는 서독의 차관 등에는 ‘오-케’하면서 僑胞들이 투자하면 日本人資本이 浸透할 憂慮가 있으니 警戒해야 한다고 白眼視하고 있는 韓國內에서의 空氣에 對하여 그들은 도저히 理解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在日僑胞들은 國內投資를 바란다”

(《동아일보》 1960년 12월 11일)

## 1. 들어가며

### 1) 문제 제기: ‘이윤 추구’와 ‘인정 투쟁’의 이분법을 넘어서

1960~1970년대 한국 경제성장에서 제일동포 기업인들의 자본투자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한일 간 경제교류가 상당 부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기에 그 정확한 규모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적어도 당시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주도 산업화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자본시장과의 연계였고, 그 전후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 제일상공인(在日商工人)들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한일국교 정상화 이전 시기에 제일상공인들은 박정희 정권 초기 경제발전 정책 추진에 핵심 아이디어와 주요 자금을 제공하는 등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 제일상공인들의 모국투자는 어떤 동기와 목표 의식 하에

이루어졌으며, 어떤 사회적 결과를 낳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당사자들의 증언에 바탕을 둔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그들의 투자행위는 ‘이윤 추구’라는 영리적 목적보다는 ‘고국 발전을 위한 헌신’이라는 비영리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주로 설명되어 왔다. 물론 자본투자자라는 행위는 정의상 영리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이 시기 재일상공인들의 모국투자에는 비영리적 동기가 크게 작용했다. 당시 재일한인 사회에 이러한 정서가 일반적이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한국사 60년 궤적과 일치하는 재일동포 기부사’이다. 재일민단에서 실시한 대표적인 기부 캠페인을 195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정리해 보면, 1950년대 전쟁 이재민 구호운동, 1960년대 구호미 및 라디오 보내기 운동, 1970년대 고향마을 발전운동, 1980년대 '88서울올림픽 성금모금운동, 1990년대 IMF위기 외화송금운동, 2000년대 한·일공동월드컵대회 성금모금운동 등을 각 시기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주역을 담당한 것이 재일상공인들인 것이다.<sup>1)</sup>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재일상공인들의 모국투자를 자본의 이윤추구 논리와 재일교포의 정체성 인정투쟁이라는 양면성을 띤 행위로 파악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재일교포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반적으로 그리 곱지 않았다. 당시 한국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재일교포는 일제 식민통치기에 조국을 등지고 떠난 후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일본 체류를 선택한

1) 재일동포 기부의 최전성기인 1970년대에 148개 본국 마을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새마을자매결연사업 및 산림녹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고향발전활동,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행사 후원금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541억 원을 기록한 '88올림픽 성금모금운동, IMF 구제금융 당시 '1가구 10만 엔 이상 본국송금운동' 등을 통해 최소 15억 달러를 모아 외환위기에 빠진 조국에 송금한 일 등은 재일동포들의 애국심과 애향심을 생생히 증언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 국내에서 350만 명의 국민들이 참가한 '금 모으기 운동'으로 마련한 외화가 20억 달러 남짓이었음을 감안하면 재일동포들의 외화송금액은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재일동포 모국공적조사위원회, 2008: 134~148 참조).

이들로서,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체제대결 국면에서 상당수는 조총련(朝總聯)에 의해 북한의 적화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이들로 상상되었던 것이다.<sup>2)</sup> 이들 중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귀국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대개 일본 사회의 밑바닥층에서 출발하여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사업을 통해서 또는 전후 사회혼란기를 틈타 암시장 등을 통해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로서, 경제적 부를 앞세워 조국 투자 명목으로 ‘금의환향(錦衣還鄕)’한 사람들로 폄하하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이들의 기여는 그들의 부정적인 정체성을 불식시키고 갱신시키기 위한 정체성 인정투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왕혜숙·김준수, 2015). 특히 1960년대 한국사회는 국가 주도적 근대화 과정에서 반일민족주의, 반공주의, 개발주의라는 세 가지 담론적 필터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재일교포’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반(半)쪽발이’, 조총련 등에서 연상되는 ‘빨갱이’, 그리고 경제대국 일본의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치부(致富)한 ‘줄부(筭富)’라는 세 가지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적이었기에 이들의 모국투자는 ‘명예회복’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권혁태, 2007).<sup>3)</sup>

과연 재일상공인들의 모국투자는 ‘경제적 이윤추구’ 행위인가 아니면 ‘정체성 인정투쟁’ 행위인가? 그들의 행위는 애국심에 바탕을 둔 공

2) 단적인 예로 당시 재일교포 중 규모가 큰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적 실업가들은 대부분 民團系에 속해 있었지만, 중소기업주들의 수는 朝聯系가 훨씬 더 많았다(《경향신문》 1962년 7월 10일자, “在日僑胞現況” 참조).

3)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권혁태(2007)는 곧잘 혼용되어 쓰이는 ‘재일교포’와 ‘재일동포’라는 두 가지 호칭이 정세적으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도식적으로 단순화하자면, ‘재일교포’는 냉전적 대결 국면에서 재일한인을 ‘분리와 배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면, ‘재일동포’는 민족적 포용 국면에서 재일한인을 ‘포섭과 회유’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주로 ‘재일교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1960년대 ‘재일한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益 추구적 행위인가 아니면 기업논리에 바탕을 둔 私益 추구적 행위인가? 이 글에서는 이들의 투자활동을 ‘이익 지향적 기업가 정신의 산물’이자 ‘진정한 애국자 정신의 발로’라는 양면성과 모순성을 띤 행위로 평가해 온 선행연구의 한계<sup>4)</sup>를 넘어서, 재일동포 기업인들의 본국에 대한 자본투자가 차별적인 양상을 띠면서 전개된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실천 동기와 구현 양상의 차이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유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행위의 실제적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문제의 설정과 비교대상의 선정

재일교포 기업가들의 모국투자가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포 기업인의 형성사적 특징과 한국 정부와의 관계 변천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제 말기 재일한인 인구는 약 2백만 명에 달했는데, 1945년 일본 패전 직후 상당수가 귀환한 결과, 약 65만 명 정도의 재일한인이 일본열도에 잔류하게 된다. 이들 대다수는 무직 또는 단순노무자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곤궁한 처지였으며, 그나마 형편이 나은 일부 한인들은 고철 수집, 빠징고, 고리대금,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정도였다. 1950년대 한국전쟁의 전쟁특수를 배경으로 호황을 맞은 일본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일부 재일한인은 고무, 유리, 정유, 피혁, 섬유, 잡화 등의 제조업에서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으며, 극소수 재일한인 기업가들은 굴지의 대기업 경영자로 성장

4) 왕혜숙·김준수(2015)는 한국사회의 재일동포 기업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을 정부의 공식 담론(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공식 담론에 제한되어 있는 자료상의 한계 이외에, 국가를 핵심적(사실상 유일한) 행위자로 설정하는 발전국가론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이론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을 꼽자면 방직공업계의 서갑호, 기계공업계의 손달원과 김상호, 섬유공업계의 이원만, 식품공업계의 신격호, 금융산업계의 이회건 등을 들 수 있다(기미야다다시, 2008: 64~90). 그렇다면 이들은 해방 이후 한국의 발전국가 성립과 한일관계 변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

이들과 한국 정부 간의 접촉과 교섭은 한국전쟁 종전 직후부터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한다. 우선 이승만 정권은 당시 사회 전반에 반일 정서가 매우 짙게 깔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의 극심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포재산 반입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부응하여 재일동포상공회의소에서는 1953~1956년간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고, 1958년 한국 정부는 재일동포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재산 반입규정을 제정했으며, 1959년에는 ‘재일한국인경제연합회(한경연)’<sup>5)</sup>이 설립되었다. 4·19와 5·16을 거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1960년대 초반에는 교포재산반입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1961년 12월에는 61명의 기업인이 방한하여 한국 정부에 경제개발지원을 약속한다. 1962년에는 ‘재일한국인상공인연합회(한상연)’<sup>6)</sup>가 설립되어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전까지 경제적 궁지에 처해 있던 한국 정부에 경제개발 5개년 계

5) ‘한경연’은 1962년 2월 22일 결성된 ‘재일한국인상공인연합회(한상연)’에 의해 흡수 통합된다.

6) ‘한상연’에 대해 자세히는 在日韓國人商工會連合會(1982)를 참조.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정부의 인정을 받은 유일한 경제단체’인 재일한국인상공인연합회 회원들 중 (대부분은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본국투자를 꿈꾸고 있는 교포 실업인들의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다. “▲原石을 가져다 가공도 하고 또한 시계침봉 그리고 각종 정밀기계부속 및 계산기 등을 만들어보자는 郭泰石氏(光陽精密寶石會社) ▲吳福珠氏(三和合成)의 비닐공장 ▲尹秉元氏(朝日工業)의 수도위생시설 ▲吳炳壽氏(朝光工業)의 자동차부속품공장 ▲金鳳鶴氏(天馬合成樹脂)의 합성수지 ▲孫達元氏(大和製鐵)의 종합제철공장 및 정유공장 ▲李康友氏(東亞興業)의 某種 기계공업 ▲辛格浩氏(로테製菓)의 某기간산업투자 등을 들 수 있다”(《경향신문》 1962년 7월 10일자, “在日僑胞現況”).

획을 수립하고 착수할 수 있는 긴급한 자금과 노하우를 제공했다.

이하 본문에서는 1960년대 발전국가의 초기 형성과정에서 재일교포 기업인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공업단지의 개발과정이다. 그렇다면 왜 공단 개발인가?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공단 개발 과정에 대한 지배적 설명방식인 발전국가론 패러다임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그동안 주로 발전국가를 공단개발의 전략적 주체로 설정해 왔는데,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이러한 방법론적 국가주의가 전략, 주체, 동맹, 결과의 네 가지 측면에서 지나친 단순화의 한계성을 띠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7)</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공단개발과정에 참여한 재일한인 기업인들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둘째는 공익 또는 사익, 애국심 또는 이윤추구라는 이분법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당시 재일상공인들의 행위 동기의 복합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데 그들이 직접 중앙정부(국가)와 맺는 관계보다는 그들의 출신 지역(고향)과 맺는 관계가 매우 중요한 매개변수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시 그들의 주된 행위 동기로 작동한 것은 ‘애국심’이라기보다는 ‘애향심’이 아니었을까?<sup>8)</sup> 당시 재일한인의 절대 다수는 남한지역 출신으로서<sup>9)</sup> 경제적으로 성

7) 그 대표적 관점이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발전주의 공업단지 형성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 주된 성과로는 박배균·김동완 엮음(2013) 및 박배균·장세훈·김동완 엮음(2014) 등을 참조.

8) 이러한 가설의 타당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례로 제주 출신 재일동포들의 “유별난 고향사랑”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962~1970년간 총 314만 9,250그루의 감귤묘목을 기증하여 감귤을 제주도의 특산물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은 물론, 호텔을 건설하여 ‘관광 제주’의 초석을 다지고, 학교를 세우고 면사무소와 마을회관을 짓고 전화 개설과 도로 포장까지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무한애향(無限愛鄉)’을 실천한 사례가 적지 않다(재일동포 모국공적조사위원회, 2008: 154~177).

9) 1964년 발간된 일본 법무성 백서에 의하면 1963년 9월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는 총 571,673명으로 그중 98.8%가 남한 출신이다(《경향신문》 1964년 7월 9일).

공을 거둔 상당 수 기업인들이 ‘금의환향’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이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긴 것은 아니며, 실행의 정도와 방식 또한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있다. 물론 반세기 이상 세월이 흐른 현 시점에서 교포 기업인 개개인의 주관적 동기와 내면적 진실을 온전히 밝혀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필자 또한 이를 충분히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 글에서는 ‘애국’과 ‘애향’을 주관적인 정서적·심리적 애착의 정도가 아니라 출신 국가나 출신 지역과 맺는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일정 정도 객관적으로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관계맺음의 변수를 중심으로 발전국가의 초창기 공단 개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재일한인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실천에 내재된 동기의 모순성, 조건의 불안정성, 결과의 다양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들 실천의 서로 다른 양상 및 서로 다른 결과가 ‘애국/애향’이라는 주관적·개인적 요인보다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나 사회적 여건과 같은 객관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음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발전국가 형성 초기에 핵심적인 경제 행위자 중 하나인 재일동포 기업가들에 대해 ‘신화’나 ‘美談’이 된 사후적 담론을 넘어서 그 실제적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례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다룰 것인가? 이 글에서는 1960년대 전국 각지에 조성된 지정 공업단지의 다양한 사례들(구로, 인천, 울산, 포항, 마산, 창원, 구미, 춘천, 원주, 대전, 청주, 대구, 사상, 목포 등) 가운데 구로, 마산, 구미의 사례를 비교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세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공통적으로 공단 조성과정에서 재일상공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공통점을 띠면서, 공단의 입지 유형별 분류 측면에서는 각각 수도권형, 임해형, 내륙형이라는 차이점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각 유형별 차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일상공인들의 기여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각 공단의 구

체적 형성과정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즉 수도권형인 구로는 출신지역의 연줄망과 무관하게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된 사례인 반면, 마산과 구미는 지역연고를 지닌 사회관계망이 주요한 행위주체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띠지만 그 전개과정에서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를 초래한 결정적 변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앙/지방’ 또는 ‘수도권형/임해형/내륙형’과 같은 공간적 변수인가 아니면 지역사회네트워크나 중앙-지방간 인적 연계와 같은 사회적 변수인가? 우선 관련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들 세 가지 사례의 특징적 양상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 2. 구로공단: 교포자본에 의해 주도된 최초의 공단건설계획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이하 구로공단)는 수도권 최초의 공단 조성 사례로서, 정부 주도로 1964년 착공하여 1967년 제1단지가 완공되었으며, 1974년까지 수출산업공단으로 조성되어 수출주도형 산업화의 수도권 전진기지로 기능했다. 구로공단은 1960년대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추진한 한국 경제개발 신화의 상징으로, 외국자본 유치, 산업단지 건설, 해외 상품 수출이라는 세 가지 아이디어를 결합시킨 최초의 결과물이었으며, 사후적으로 ‘한강의 기적’의 첨병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공단개발의 실제 전개 양상은 애초의 계획과 취지나 사후적으로 형성된 신화적 담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195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외자 유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재일교포 자본에 적극적 유치 의사를 표명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일본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상당수 재일교포 기업인들도 일본의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으로 인해 경영난에 봉착한 상황이었다. 일본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유형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던 재일교포 기업인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한국 진출에

적극성을 띠었다. 한국 정부에서 재일교포 자본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강력한 반일민족주의를 내세웠던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들어선 1960년 4.19 이후의 일이다. 다음 《동아일보》 기사는 ‘교포 실업가들의 귀환’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던 당시 한국 사회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그들(僑胞實業家들-인용자)은 4.19 以後에 祖國의 民主的인 發展前途가 어느 程度 明朗性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過去 어느 때보다도 韓日國交가 正常化될 可能性이 濃厚하다는 데서 韓國으로의 歸還을 決心한 것 같다. 勿論 이러한 決心과 同時에 南韓에 對한 經濟的인 浸透를 企圖하고 있는 日本實業界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僑胞實業家들과 어떠한 형태의 關聯性을 맺고 있는 가도 큰 注目거리가 아닐 수 없다. 現在 日本 全域에 걸쳐 居住하고 있는 六十萬名의 僑胞들이 經營하는 各種企業體는 約七百餘個로 集計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日本業界에서 遜色없이 企業活動을 하고 있는 所謂 屈指의 業體는 約十餘個에 達하고 있으며 母國投資問題는 거의 이들에 依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다(《동아일보》 1960년 12월 11일).

하지만 한일관계의 불안정성과 한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미비로 인해 한국 정부와 재일교포 기업인들의 교섭은 쉽게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이들의 귀국 또는 모국투자를 어렵게 만든 장애물은 재산반출을 금지하는 일본 정부나 경제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한일 간 외교관계 문제만이 아니었다. 우선 교포실업가들이 “재산을 가지고 들어오면 털어먹으려는” 한국 관리들에 대한 뇌물 비용 때문에 귀국을 포기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sup>10)</sup> 또한 박정희 정권 초기에는 거액의 재일동포

10) 다음 기사를 참조: “‘내 친구 한 사람은 일본에 있는 업체를 한국으로 옮겨가려다가 다 틀렸습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유는 한국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지 않아 세관 등에서 시일만 잡아먹고 있는 돈을 거의 탕진해 버린 후 일본에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P씨는 “한국에서 기업을 하면 관리

반입재산이 여당의 정치자금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sup>11)</sup> 이원만은 초기 국면에서 이러한 교착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해결사’ 역할을 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 근교에 경공업읍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 것도 이원만이였다.<sup>12)</sup> 구로산업단지의 정식 명칭은 ‘한국수출산업단지’로서 제일교포자본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저비용 노동력과 결합시켜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보세가공기지의 모델을 형성했다.

수출산업단지는 외국인, 특히 제일교포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국가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개발되었다. 당시 정부는 수출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계와 재계가 긴밀히 연대할 협력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63년 3월 ‘수출산업촉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한편, 이 기구를 앞세워 제일교포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에 제일교포 기업인들은 모국 진출을 희망하면서 대정부 관계 등 행정적 뒷받침을 할 창구와 보세가공이 가능한 산업단지 조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정부는 1964년 6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제1단지를 서울 구로동에 조성하게 되었다.<sup>13)</sup> 그

---

들에 대한 ‘와이로’ 비용이 많이 든다죠”라는 한마디를 잊지 않았다. 재산을 가지고 들어오면 털어먹으려는 한국의 실정을 교포실업가들은 모두 경계하는 태도였다”(《동아일보》 1960년 12월 11일자, “在日僑胞들은 國內投資를 바란다”).

- 11) 제일교포 반입재산의 일부가 정치자금화되고 있다는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는 《경향신문》(1964년 11월 10일자 기사) 참조.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해 외자도입이 본격화된 1960년대 후반에는 외자와 관련된 부정부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져서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박정희의 승리도 이러한 정치현금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당시의 공공연한 비밀이였다.
- 12) 이원만은 1963년 박정희에게 수출전용공업단지 설립을 제안했으며, 구로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창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68년 대통령상, 1977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원만의 생애에 대해 자세한 것은 그의 자서전(이원만, 1977)을 참조.
- 13) 1960년대 초 구로동 산업단지 예정지역은 논과 밭,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야산에는 미국 공군 탄약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서울 중심가 재개발 때

<표 1> 1965-67년간 제1공단 입주기업 현황

구분	지정	취소	소계
재일교포 기업	22	4	18
내국인 기업	16	5	11
외국인 기업	2	0	2
합계	40	9	31

자료: 한국수출산업공단, 1994.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재일교포의 재산을 반입하여 영등포 구로동과 부평지구 대지 약 30만 평에 20개 이상의 기업체를

공동설립하여 연간 약 3천만 불의 외자획득계획을 세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을 성안, 곧 각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은 대판과 동경에 있는 재일교포들의 재산을 반입하여 주로 비닐장갑, 금속완구류, 메리야스 등 25업종을 생산 수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同法은 재일교포들의 반입재산에 대한 지분을 정부가 보충하고 개발기업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한다.<sup>14)</sup>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6년 입주 당시 총 21개사 가운데 14개사가 재일교포 기업이었는데, 섬유, 봉제, 가발, 전기 등 경공업 중심으로 1967년 이후 전국적인 ‘선분양 후개발’ 방식의 지방공단 조성 붐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구로공단은 조성 직후부터 애초의 계획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1967년 이후로는 재일교포 기업의 신규 입주는 소멸했는데, 그 주된 원인을 꼽자면, ① 정부의 태도 변화, ② 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투자 여건의 미비, ③ 재일교포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등 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 확산 등을

도심에서 이주한 난민촌이 있었을 뿐 원주민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으로, 토지가격도 평당 300~800원 정도였다. 또한 영등포에서 수원으로 통하는 1번 국도가 근접해 있고, 경부선 영등포역까지 5km에 불과하였으며, 용수공급을 위한 취수장을 건설할 수 있는 안양천과 도림천이 인접해 있었다. 부지의 확보가 용이하면서도, 교통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14) 《경향신문》 1964년 2월 24일자, “수출산업 공업개발 추진. 교포재산으로, 九老洞·富坪에.”

들 수 있다. 1968년 대대적인 무역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전용공단’의 신화와 현실의 괴리를 극복해 보고자 안간힘을 기울였지만,<sup>15)</sup> 1969년 2공단 가동 이전까지는 실적 부진을 만회하지 못했으며, 졸속 행정으로 영세기업들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등 수출지향형 산업단지라는 애초의 목표는 사라지고 1978년 이후로는 단순한 ‘중소기업 경공업단지’로 전략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장세훈, 2014: 160~177).

이처럼 구로공단은 교포자본을 위한 경제특구이자 수출전용공업단지로서 제일교포 기업인들에 의해 제안되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추진력에 힘입어 급속하게 현실화되었으나, 그 역사적·정치적 중요성에 비해 실질적 성과는 다소 부진했으며, 나중에는 본래 의도와는 다른 성격으로 변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수도권에 조성된 구로의 사례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여건 속에서 진행되었던 지방공업단지의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조성사업이 전개되었을까?

### 3. 마산공단: 임해기계공단 조성계획의 좌절과 굴곡

구로공단의 사례와는 대조적으로, 마산공단은 1960년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상공인 주도로 추진된 최초의 임해공단 조성계획이다. 마산은 일제하 식민지 산업화의 영향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발전이 진전된 공업도시였다.<sup>16)</sup> 특히 1960년대 남한의 대부분 산업도시가 소비재 경공업 위주였음에 비해, 마산의 제조업은 기계 및 금속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마산은 1960년대 중반에 이

15) 1968년 무역박람회에 대해서는 《매일경제신문》(1968년 9월 10일자 기사) 참조.

16) 일제하 마산의 도시화 양상에 대한 대표적 연구성과로는 허정도(2005)를 참조.

미 기계류와 금속 관련 제조 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마산 공단 건설 프로젝트는 내부적으로 많은 난항을 겪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마산시가 임해지역 매립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마산의 임해공업단지 조성에 큰 역할을 한 재일상공인으로는 이명조와 손달원이라는 두 인물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조는 마산 출신으로 일본에서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1966년 이후 귀국하여 영남 일대에서 건설업에 참여했다. 그는 1971년까지 마산, 포항, 울산 지역의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공사에 참여했는데, 마산 지역에서는 봉암동 일대 매립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최영진, 2014: 157). 평안남도 양덕 출신인 손달원은 1929년 도일하여 대화제관(大和製纈)을 설립했으며, 전후 신일본공기(新日本工機)를 인수하여 1962년 당시 3,100명의 종업원, 연생산액 215억 엔에 이르는 일본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sup>17)</sup> 그는 당시 박정희 정권과 모국투자문제를 협의한 교포실업가 중에서는 드물게 북한지역 출신으로, 1962년 방한하여 박정희와 만나 기계공업 육성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처음에는 기계공단 조성 후보지를 울산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sup>18)</sup> 동양중공업 개발회사가 발족한 1966

17) 손달원에 대한 당시 국내 언론의 소개는 다음 기사를 참조: “平南 陽德 出身인 손 씨는 23세 때(1929년) 渡日하여 大阪의 어느 염료공장에 취직한 후 12원의 월급 중에서 2원만을 쓰고 13원을 3년 동안 저축하여 5백 원의 저축금을 모아 콜크공장을 1935년 때부터 시작한 것이 대성하여 製纈공장을 갖게 되어 종전 후에는 당시 군수공장이었던 신일본공기를 불하받아 현재 종업원이 3천백 명 연산액 2백15억 원(환화 약 8백60억 환)의 실업가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경영하고 있는 대화제관이나 신일본공기에는 한국인 종업원이 단 4, 5명밖에 없다고 하며 그의 기업체의 주식은 약 절반을 八幡製鐵系の 日人が 갖고 있다 한다”(《경향신문》 1962년 4월 13일).

18) 《경향신문》 1962년 3월 31일자, “蔚山공업센터 준비 豫定보다 快速調” 기사 참조. 또한 울산 지역 내에서의 입지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조: “ 그동안 서독기술자들이 세밀한 지형지질을 조사하여서 方魚津邑 鹽浦浦에 건설키로 예정되었던 종합제철공장의 부지와 蔚山邑 三山平野에 세워질 예정이던 비료공장 부지 등 양 후보지가 지리적인 조건으로 정유공장건설 부근 자리인 대

년에는 공단 조성 후보지를 마산으로 변경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기공식까지 치르게 된다.<sup>19)</sup> 하지만 제일교포 이명조가 추진해 온 매립공사가 자금난으로 난항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부실공사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마산공업단지 조성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1968년에 이르러면 정부가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동양중공업 주도의 기계공단 조성계획은 좌절되고 결국 손달원은 한국 투자를 포기하게 된다.<sup>20)</sup> 그러나 마산시장이 동향 출신인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을 찾아가 하소연하면서 마산시 대신 농어촌개발공사가 매립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1968년 미국 컨설팅회사(A.T. Kearney)에 기계공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1969년 미쓰비시 보고서와 상공부 안의 차이로 인해 논란을 겪는 우여곡절 끝에 기계공단에서 수출자유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마산의 산업단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박배균·최영진, 2014).

이처럼 마산의 수출공단 선정과정에서 제일교포 사업가와 지역정치인 인맥이 크게 작용했는데, 특히 교포실업가 이명조와 정권 실세인 박종규로 대표되는 지역 연고를 지닌 인물들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음은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손달원의 동양중공업 안이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무산되었는가라는 점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당시의 기록과 증언 및 정황을 종합하여 추론해 본다면, 박정희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기계공단 조성에 대해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으나, 1960년대 한국경제 여건상 대규모 기계공단 조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기상조인 면이 있어서 유보될 수밖에

---

峴面으로 옮겨진다는 ‘位置變更說’은 대다수 蔚山郡民들에게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지는 모르나 3,335戶(18,180여 명)의 대현면민들에게는 커다란 자극제의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동아일보》 1962년 4월 6일자, “蔚山 공장위치변경설로 당황”).

19) 《경향신문》 1966년 11월 11일자, “마산 임해공단 기공.”

20) 《경향신문》 1968년 8월 20일자, “마산 임해공단 매립공사 중단.”

에 없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1973년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에야 창원에 기계공업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최영진, 2014).

하지만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 결정이 언론매체의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구체적 양상과 그 과정에서 동원되는 대중 담론의 의미론적 특성이다. 우선 1960년대 초에 5·16 군사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배경으로 ‘기계공업 붐’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기계공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62년경에 서부터 촉발되어<sup>21)</sup> 다년간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치면서도 1967년까지 지속되었다. 재일상공인 중 기계공업계의 대표격 인물이었던 손달원은 당시 정권 최고위에 참여하고<sup>22)</sup> 한국경제인협회에 가입하는<sup>23)</sup> 등 기계공업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와 재계의 사업 파트너로서 늘 제

21) “1962년 3월 27일 孫氏가 귀국하자 李秉喆, 李庭林 諸氏 등 國內有數의 실업인들이 손수 울산지구에 그를 안내했고 지난 1일에는 최고회의에서 박의장 참석하에 손 씨를 포함한 이례적인 국민연석회의가 베풀어졌으며 그날 하오에는 조선호텔로 장소가 옮겨져 회의가 속개되었다. 마치 손 씨의 귀국과 더불어 온 “기계공업 붐”이다. 손 씨의 제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국내실업인들이 모여 20억 원의 ‘동양공업’을 설립하기로 합의되었다고 하며 6천만 불 내지 7천만 불의 외국차관을 얻어 이 차관으로 손 씨가 일본에서 경영하고 있는 신일본공기로부터 기계공장시설을 도입하여 年産 5천만 불의 대규모의 기계공장을 울산에 건설하기로 합의되었다는 것이 소식통의 말이다. 그리고 3년간의 건설기간 중 손 씨는 금년부터 120명의 기술자를 일본에 초청하여 기술을 연마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이다”(《경향신문》 1962년 4월 13일자, “기계공업·붐”).

22) “손달원 씨 일행 5명은 9일 최고회의 종합경제심사위원회에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위한 각종 공장건설 세부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하 재경위원장을 비롯, 박태준, 유원식, 오정근 위원 및 정 상공부장관 등 경제관계 고위관리와 이병철 씨 등 국내 주요 실업인들이 합석하였다”(《경향신문》 1962년 6월 9일자, “각종 공장건설 세부계획 설명. 손달원씨 最高議서”).

23) 1962년 한국경제인협회는 10명의 신규회원 가입을 승인하면서 회원 수가 32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 4명의 재일교포 실업인들을 특별회원 자격으로 가입시켰다. 재일교포상공인연합회의 회장인 이강우(三亞藥品, 약품제조업)와 부회장인 許弼奭(주식회사 모나미, 의복가공식품판매업), 손달원(新日本工機, 기계 및 鑄鐵제조업), 신격호(주식회사 롯데, 제과업) 등 4명이다(《동아일보》 1962년 7월 11일자, “경제인협회에 교포 첫 가입”).

1순위로 거론된 유력 인물이었다. 다음 신문기사는 1967년 말까지도 손달원이 이 분야의 핵심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충훈 경제기획원 장관은 14일 손달원과 만나 2차 5개년계획의 주요 산업의 하나인 종합기계공장(4,800만 달러 규모) 건설계획을 既定 방침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손달원은 15일 박 대통령을 방문하여, 정부 방침을 확인했다. (중략) 이날 박 장관과 손 씨 간의 협의에서 종합기계공장 건설 추진 형태에 대하여는 결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초 계획은 손달원 씨 투자 50%, 정부주선투자 50%로 하고, 자본금은 손 씨 51%, 정부 측 49%의 비율로 추진키로 했었다. (중략) 정부가 입지를 마산으로 내정하고 있는 이 종합기계공장 건설을 위해 손 씨는 제1단계 주물공장(1,200만 달러)과 2단계 공작기계공장(2,800만 달러) 건설 소요 外資를 일본에서 600만 달러, 서독에서 1,400만 달러를 借款키로 교섭되었다고 하며 나머지는 정부가 주선하는 차관으로 충당키로 되어 있다(《매일경제신문》 1967년 11월 15일).

마산종합기계공업단지 조성계획은 특히 군수산업 건설의 일환으로 병기제작을 위한 일부 공작기계 생산까지 염두에 둔 계획으로, 정부가 주선하는 투자 45%, 동양중공업 투자 55%로 합작하여 자본금을 630만 불로 계획되었다. 정부는 당초 3,600만 불의 차관계획 중 1천만 불은 서독차관에 의존할 예정이었으나 서독과의 외교관계 硬化로 대일 재정차관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sup>24)</sup> 그런데 1968년 5월 마산기계공단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공표된 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정부의 입장이 ‘보류’로 돌변하게 된다.<sup>25)</sup> 그 주된 원인은 교포자

24) 《매일경제신문》 1968년 5월 3일자, “종합기계공장건설 3,600만 불 재원계획 변경 1천만 불은 대일차관으로.”

25) 《매일경제신문》 1968년 5월 15일자, “종합기계공장 건설 정부서 보류방침.” 이 기사에 따르면, “상공부 李雨龍 鑛工電차관보는 종합기계공장 건설계획의 保

본과 박정희 정권 간에 상호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에 있을 텐데, 이러한 정책적 결정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여론 조성과정은 ‘이북 출신’ 재일교포와 ‘일본계 자본’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방식이었다.

우선 당시 한국 사회에 팽배했던 반북·반공 의식에 편승하여 평안도 출신 교포기업가인 손달원을 부도덕한 인물로 폄하한다거나 그의 모국투자활동의 진정성(‘애국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담론은 이미 1960년대 초부터 제기되었다.

“日本内の 不正蓄財者”라고 李秉喆氏가 評한 그(손달원-인용자)는 일본 내의 한국인 기업가라기보다도 일본 내의 외국인 기업가인 것 같다. 앞으로 5개년 경제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될 기계공장 건설에 이른바 그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만큼 발휘될지 궁금하다(《동아일보》 1968년 2월 10일).

이처럼 손달원은 일본에서의 기업활동의 이력에 대한 의심의 눈길과 더불어 북한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북·용공 성향을 띤 인물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의 눈길도 적지 않았다. 더구나 교포기업가들이 모국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인을 통한 밀거래나 정부 인사나 관료들과 불투명한 뒷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부당거래’ 의혹은 야당의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sup>26)</sup> 또한 손

---

쫘는 시장성이 없고, 재정상 형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경향신문》(1968년 5월 15일자)에 따르면 “공장 건설보다는 현재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정부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 26) 《동아일보》(1966년 8월 6일자)의 다음 기사를 참조: “民衆黨의 金大中 의원은 6일 한일문제를 따지는 국회관계분회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東京에서 東洋重工業의 이름으로 캐바레를 하고 있는 朴某씨에게 3천6백50만 불의 상업차관지불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모 씨가 실질적으로 中共이나 北傀와 거래를 하고 있는 新日本工機의 孫達元씨와 깊은 관계가 있

달원은 북한지역 출신이라는 이력으로 인한 의심과 폄훼뿐만 아니라, ‘일본계 자본’이라는 점에서도 사회적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한 일회담과 6·3사태 이후 만연한 반일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향후 국가 경제성장의 중핵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기계공단 건설을 일본계 자본의 손에 맡기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7)</sup> 당시 기계공업은 단지 국가 기간산업일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으로서 ‘자주국방’의 핵심 프로젝트로서의 성격까지 겸하고 있었기에 그러한 사회적 검증과 비판의 시선은 더욱 날카롭게 작동했다. 한국 기계공업의 초석 마련에 필요한 최우선의 책임자로 공인받았음에도, 손달원과 협력사업이 다년간의 소모적인 줄다리기 끝에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실질적 원인은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지만, 적어도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난 의견상의 원인은 ‘북한지역 출신 교포 실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상의 부정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손달원의 동양중공업 안이 전면 철회된 이후 기계공단 건설 프로젝트를 미국계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받아 그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기에 이른다.<sup>28)</sup>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그 후 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인

다고 주장했다.”

27) “기초공업의 소유와 운영의 주도권을 정체불투명한 일본계 자본에 넘겨주는 이 유를 이해하기 힘들다”(《동아일보》 1968년 2월 12일자 사설).

28) 《매일경제신문》 1968년 9월 14일자, “工作機械工場 건설 건의 年産 2천600대 목표. 美 커니社 外國과의 技協 등 체결도”; 또한 1970년의 다음 기사도 참조. “중공업화를 위한 청사진은 前 MIT(美 매서츄세츠工大) 교수이며 현 바텔연구소 고문인 崔榮準(43) 박사를 중심으로 한 바텔연구소와 한국의 과학기술연구소(KIST) 등 두 권위 있는 기관의 기술진이 7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이다. (중략) 현재 건설 추진 중인 포항종합제철 외에 ① 特殊鋼 ② 鑄物銑 ③ 重機械 ④ 造船 등 4대 핵심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중략) 5.16혁명 직후부터 추진된 종합기계공장은 재일교포인 손달원 씨에 의해 구체화되기까지 했으나, 그가 지나치게 정부에만 의존하려하여 좌절되고 말았던 것. 중기계공장은 또 필요에 따라 군수공장으로 전환되어 방위산업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에 큰 몫을 차지한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매일경제신문》 1970년 6월 27일자,

1973년 9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창원기계공업단지 건설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이 단지 건설의 목적은 1981년까지 104개의 공장을 건설해서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150억 달러 이상의 연간 생산량을 달성하는 것으로, 불과 1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는 농촌지역이었던 창원을 세계 최대의 공업단지 중 하나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이었다. 1973년 12월 24일 정부가 공표한 공업단지개발육성법은 여천(석유화학), 옥포(조선), 포항(제철), 온산(비철금속), 구미(전자)에 각각 차별화된 중점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다섯 곳의 공업단지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다.<sup>29)</sup>

#### 4. 구미공단: 특혜 받은 지역성과 강력한 지연 네트워크의 결합

이처럼 1970년대에 접어들면 공단개발은 중앙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따라 제정된 공업단지개발육성법에 의해 추진된다. 이 시기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공업단지로 조성된 구미공단도 동일한 국가정책의 지원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구미공단이 초기부터 전자공업으로 특화되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1960년대 공단도시 개발의 여러 사례들 가운데 구미공단의 입지 결정은 주로 임해지역에 위치한 대다수 다른 공업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sup>30)</sup> 영남 내륙의 농촌 지역, 금오산 기슭의 낙동강변에 대규

“고도화될 산업구조 중공업개발종합계획. 防衛産業과 연관”).

29) 주지하다시피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자주국방’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당시 방위산업과 관련된 대규모 개발에는 한국중공업, 기아산업, 대우중공업, 럭키금성 등 총 84개의 회사가 참여했다(김형아, 2005: 309~310 참조).

30) 박목월의 시 『구미공단』(1974)은 이 낙동강변의 ‘기적’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우리는 금오산 기슭의/ 쓸모없는 낙동강변 3백50만평을/ 밭과 슬기, 단결

모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기획은 어떻게 제기되어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을까?<sup>31)</sup>

초기 단계에서 구미공단 제1단지 조성을 추진한 양대 사업주체는 경상북도와 한국전자공업공단이었다. 애초에 경주 일대<sup>32)</sup>에 지방공단을 유치하고자 했던 경상북도청에서는 구미지역<sup>33)</sup>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1969년 초 결성된 ‘구미공단설립추진위원회’가 경상북도청에 강력한 로비를 가한 결과,<sup>34)</sup> 전격적으로 구미지역으로 공단의 입지를 변경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변경에는 물론 구미가 공단입지의 최적지임을 주장한 ‘구미공단설립추진위원회’의 건의서<sup>35)</sup> 등도 작용했겠지만, 구미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배제하고는 이러한 이례적인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역연고자들의 인적 네트워크의 작동방식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지역유지로서 ‘구미공단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장월상

과 협조로써/ 전자공업단지를 이룩하였다/ (후략)”

31)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구미공단 형성사에 대한 이하의 서술은 구미수출산업공단(1991: 109~147) 및 황진태·박배균(2014)에 의존했다.

32) 현재 경주시로 편입된 경상북도 월성군 안강면 지역이 후보지였다.

33) 1960년대 구미는 인구 2만 명 수준의 작은 읍에 불과했다. 이 지역은 본래 선산군 구미면이었다가 1963년 구미읍으로 승격했으며, 1978년 구미읍과 칠곡군 인동면이 합쳐져 구미시로 승격되었다. 1995년에는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쳐져 도농통합형의 통합 구미시로 확장되었다.

34) ‘구미공단설립추진위원회’는 1969년 1월 3일 선산군수 박창규를 포함한 50여 명의 지역유지들이 결성했으며, 농지개량조합장인 장월상이 위원장을 맡았다. 장월상 위원장은 박정희와 보통학교 동기라는 학연을 바탕으로 당시 양택식 경상북도지사를 압박했다(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10).

35) 이 건의서에 제시된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경북선 철도의 경유지이자 경부고속도로의 경유 예정지라는 점, ② 낙동강이 지척이어서 공업용수가 풍부함, ③ 반경 40km 범위 내에 노동력 자원이 풍부함, ④ 농업용으로 부적절한 유향지가 많아 용지매수 비용이 절감됨(한국전자주식회사, 1985: 66; 박배균·장세윤·김동완, 2014: 235에서 재인용).

이외에, 구미공단 건설을 추진한 주요 행위자로는 지역정치인 김봉환, 교포기업인 이원만과 곽태석 등을 들 수 있다(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09~115). 특히 교포기업인들은 지역유지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공단 조성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에서 구미공단의 조성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은 한국도시바를 설립한 곽태석으로, 그는 1971년 8월 구미공단 조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한국 전자공업공단의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구미공단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1921년 경북 선산군 해평면(지금의 구미시)에서 태어난 곽태석은 1937년 독일하여 1948년 광양택시를 설립하고, 1957년 광양정밀을 설립하여 전자산업에 진출했으며, 1966년 구로에 설립된 한국수출산업공단에 입주하여 싸니전기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는 구미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봉환을 매개로 1967년 2월 청와대를 방문하여 박정희에게 전자공업 육성방안을 제안했는데, 그 결과 일본 도시바와 합작하여 국내에 반도체 생산공장 설립을 건의하여 1969년 한국도시바 구미공장을 착공하게 된다.

구미공단의 초기 형성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또 한 사람의 재일 교포 기업인인 이원만에 대해서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경북 영일 출신으로, 1933년 독일하여 1937년 아사히피복주식회사를 창립하여 운영하다가 1945년 광복과 함께 귀국하여 대구에 직물공장인 경북기업을 창립했다.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1957년 일본 기업과 합작으로 대구에 한국나일론(Korea Nylon)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훗날 코오롱그룹의 모태가 된다. 앞서 구로공단 조성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해방 직후에 이미 귀국할 결심을 하고 정계 진출을 시도하는 등 1950년대부터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는 물론 중앙정계에까지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당한 정치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의 자서전 제목인 『나의 政經五十年』(197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원만은 코오롱그룹을 설립한 경제인이자 동시에 제5, 6, 7대 3회에 걸쳐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었던 것이다.<sup>36)</sup> 애

초에 그는 경북 영천에 공장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구미공단 조성이 결정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1970년 한국포리에스텔 구미 공장을 기공하여 이듬해인 1971년에 준공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1969년 광태석에 의한 한국도시바 구미공장 설립으로 인해 구미공단을 전자공업으로 특화시키는 계획과 더불어 이후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에 발판이 마련되었다면, 1970년 이원만에 의한 한국 포리에스텔공장 설립은 구미공단 제1단지가 한국의 대표적 섬유공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당시 공업화나 도시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내륙 농촌 지역이었던 구미지역에 이례적으로 과감한 교포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의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수출공업단지로서 훨씬 유리한 입지여건을 지닌 울산이나 마산과 같은 다른 지역들조차도 자본유치나 공단조성 과정에서 상당 기간 난항을 겪었음에 비교해 본다면, 객관적으로 훨씬 더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구미공단의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외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충실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단개발의 정치경제적 동역학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매우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필자의 역량과 이 논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이하에서는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교포자본의 성격과 역할이라는 변수에 한정하여 제시한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그 원인 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자 한다.

36) 이원만은 제5대 참의원(경북, 민주당, 1960-61), 제6대 국회의원(대구, 공화당, 1963-67), 제7대 국회의원(대구, 공화당, 1967-71)을 역임했다.

## 5. 교포자본의 공단개발 참여와 ‘애국/애향’의 실천

이상에서 검토한 세 가지 사례의 비교분석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로공단의 경우는 1960년대 초 정부-교포자본 간 이해관심의 일치에서 출발하여 한국 최초의 ‘교포자본 전용 수출산업공업단지’로 기획되었지만, 이후 국내외 상황 변화와 사회적·제도적 제약으로 본래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그치고만 사례다. 둘째, 마산 기계공단 조성계획은 정부의 국책 의지와 지역 사회-교포자본 간 이해관심의 일치에서 비롯되었지만, 재일교포에 대한 사회적 불신, 일본계 자본의 국내경제 침식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의 작동으로 인해 좌절과 지연 및 계획 변경의 우여곡절을 거쳐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된 사례다. 셋째, 구미공단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개발 특혜가 보증된 예외적 지역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광태석과 김봉환, 이원만과 박정희의 개인적 관계가 핵심 추동력이 되어 급진전된 사례로,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수출형 전자산업공단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된 경우로 볼 수 있다. 비교분석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이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이론적 함의는 무엇일까? 본고에서 비교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구로, 마산, 구미 세 공단도시 사례를 입지 유형 면에서 분류해 보면 일차적으로 수도권과 지방도시(비수도권)로 대별된다. 즉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된 전자의 사례와 달리 후자의 경우는 지방에 연고를 지닌 재일상공인들을 비롯한 지방행위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진다.<sup>37)</sup> 하지만 교포자본이 개발동맹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37) 박정희 정권기 산업단지 조성과정은 국민경제와 국가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관료와 정치지도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장소의존적 이해를 가진 행위자, 재일교포 사업가와 같은 초국가적 행위자,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이 지역과 국가적 스케일 모두에 연결되어 활

〈표 2〉 구로·마산·구미 지역 공단개발과정의 비교

사례	입지 조건	주도 인물	출신 지역	주요 파트너	초기 계획	진행 경과	최종 결과	작동 담론
구로	수도권 지역	이원만	경북 영일	중앙정부	구로수출 산업공단	초기 성공적, 이후 단순 중소기업 단지로 변질	한국수출 산업공업 단지	애국
마산	경남 임해지역	이명조 손달원	경남 마산 평남 양덕	지역 경제인	마산기계 공업단지	사업 중도 백지화, 계획 변경 후 재추진	마산수출 특구+ 창원기계 공단	애국/반공/반일
구미	경북 내륙지역	곽태석 이원만	경북 선산 경북 영일	지역 정치인 + 중앙정부	구미수출 산업단지	열악한 인프라 불구, 중앙정부 지원으로 사업 가속화	구미전자 공업단지	애향/애국

두 사례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난항 끝에 계획의 유효와 좌절로 귀결된 마산의 사례와 이례적으로 급속하고 순탄하게 추진된 구미의 사례는 선명한 대비를 드러낸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공단개발과정에 참여한 교포자본의 성격과 역할의 차이가 그 중 하나의 주된 변수로 작용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마산 기계공단 추진계획의 ‘좌절’ 사례와 구미 수출공단 추진계획의 ‘성공’ 사례에서 재일상공인들은 각각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는가? 전자에서 이명조와 손달원의 역할과 후자에서 곽태석과 이원만의 역할은 어떤 차별성을 띠고 있으며, 그것은 공단개발의 추진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했는가?

반일·반북 이데올로기라는 장애물에 발목이 잡혀 손달원의 참여가 좌절된 마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구미의 경우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첫째, 구미공단 프로젝트는 장월상을 필두로 한 지역유지들의 ‘밀어붙이기식 공단유치작전’이 곽

동하는 다중스케일적 행위자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발적이고 역동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박배균·장세훈·김동완, 2014: 243).

태석과 이원만으로 대표되는 교포 기업인들의 자본투자와 공장건립의 실행을 통해 전폭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실현될 수 있었는데, 이는 상호 간에 강력한 신뢰관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즉 광태석과 이원만으로 대표되는 교포 기업인들이 장월상과 김봉환을 중심으로 한 지역유지세력과 공통의 지역연고를 토대로 긴밀한 인적 결합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강력한 연합적 주체가 창출되었다는 점이 구미공단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핵심 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단순히 지방 유력자들의 긴밀한 인적 유대관계만으로는 이러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또한 성공의 필수 요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의 총체적으로 불안정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이러한 믿음은 정권 실세와의 긴밀한 인적 연결망이 없이는 확보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구미공단 형성과정의 예외성은 한편으로는 당시 지역개발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그 모든 불안과 불신을 무화시키거나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안정된 정치권력에 대한 믿음과,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지역연고에 바탕을 둔 여러 세력들 간에 긴밀한 인적 신뢰관계가 화학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제반 사회 여건의 불안정, 미래 전망의 불투명, 상호 관계의 불신으로 인해 ‘이윤 추구’ 동기만으로 모국투자를 감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장소의존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의 주체들이 단일한 개발동맹을 형성할 수 있었던 구미의 사례는 ‘애향적 실천’이 ‘애국적 실천’을 담보하는 혹은 ‘이윤 추구’를 통해 ‘애향적 가치’와 ‘애국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이례적인 특수 조건을 창출했던 것이다.

## 6. 나오며

1960년대 재일교포 기업가들에게 모국투자란 단지 이윤추구를 위한 합리적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국에 있는 부모형제들에 대한 경제보조와 생활향상을 위해 조그마한 생활근거라도 마련해 주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收支打算이 서면 조국의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基幹産業에까지 투자하겠다”<sup>38)</sup>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한일 간의 외교·통상 교섭상의 제도적 미비점뿐만 아니라 식민화와 전쟁의 상흔으로 인한 반일·반공의 사회적 분위기, 정치·사회적 미성숙으로 인한 불합리한 관행의 존속 등 교포 기업인들의 ‘애향심’과 ‘애국심’의 실천을 가로막는 사회적 걸림돌이 적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모국투자가 실현된 사례들을 공업단지 개발의 세 가지 대표적 사례를 통해 비교분석함으로써 당시 교포자본의 모국투자라는 역사적 실천의 실제적 진실에 접근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공단도시 개발과정에서 재일상공인들의 ‘애국/애향’의 정체성 정치가 지역사회와 결합하는 몇 가지 대별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결합의 양상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로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는 개발주의와 이윤추구 논리의 국면에 따른 결합과 갈등이다. 교포자본의 모국투자라는 사회적 실천을 논함에서, 구체적 행위자 개개인의 내면적 동기가 무엇이든, 자본의 존재론적 속성상 이윤추구 목적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요인은 세 가지 사례 모두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사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 교포 기업인들의 이윤추구 행위는 외견상으로는 ‘애국심’ 담론으로 표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교포 자본의 교섭 파트너로 직접 나섰던 구로공단의 사례와 달리, 지

38) 《경향신문》 1962년 7월 10일자, “在日僑胞現況.”

방공단 개발에서는 교포 기업인 개개인의 지역연고 및 지방유지들과의 인적 연계가 주된 변수로 작용했다. 그 점에서 당시 교포자본의 모국투자를 추동한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애국’보다는 ‘애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지역정치와 ‘애향심’의 선택적 친화성이다. ‘애향심’이 교포 기업인들의 모국투자의 진정성의 주요한 한 측면을 형성하고 있음은 애향적 실천이 가장 왕성하고도 꾸준하게 전개되었던 제주도의 사례<sup>39)</su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장 설립이나 공단개발투자와 같은 기업의 전략적 행위를 ‘애향심’과 같은 순수한 정서적 동기로만 환원할 수는 없다. ‘애향심’은 지역연고를 공유하는 상호 신뢰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와 적극적으로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활성화된 지역정치와 결합하여 개발동맹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현실화되기 어렵다. 본고에서 분석한 세 가지 사례 가운데서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한 결과로 기계공단건설계획이 좌절된 것이 마산공단의 사례였다면, 구미공단의 이례적인 성공 사례는 이들 요인의 성공적 결합에 바탕을 둔 시너지 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반일 및 반공 이데올로기가 미친 영향과 관련된 요인으로, 교포 기업인들의 본국진출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작용한 이데올로기적 장치의 효력이다. 즉 당시 한국사회에 팽배했던 반일적 민족주의와 반공적 국가주의 담론은 교포 기업인의 ‘애국심’을 검증하고 판별하는 기준으로 상당한 단속 및 검열 장치의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마산공단 사례에서는 손달원의 동양중공업 건설안을 취소시키고 기계공단 조성안 자체를 보류시키고 전면 수정하는 정책적 결정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담론적 장치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제일동포 기업인들의 모국투자를 바라보는 ‘이윤 추구’

39) 제주 출신 제일동포들의 “유별난 고향사랑”에 대해서는 각주 8) 참조.

와 ‘인정 투쟁’이라는 이항대립적 관점의 한계를 넘어서 그 복합적이고 관계적인 양상을 밝혀내기 위해 발전국가의 공단개발과정에 교포 자본이 참여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을 유형화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이루어진 관련 학계의 최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구로, 마산, 구미 세 지역의 공단형성사를 비교분석했는데, 이를 통해 교포 기업인들이 중앙정부와 지역정치와 맺는 관계 방식의 차이에 따라 그들의 ‘애국’과 ‘애향’의 정체성 정치가 가변적 양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심층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를 띤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로부터 파생되는 몇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교포 기업인들의 모국투자는 ‘진정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있는가? 과연 ‘사익/공익’의 이분법을 넘어서 이들의 역사적 행위에 대한 의미 분석이 가능한가? 둘째, 이 글에서 제기한 ‘애국/애향’의 정체성 정치를 다른 지역개발 사례에도 확대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지역사회 변동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관점의 분석에서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행위자들의 존재방식과 행위양식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변수화할 수 있는가? 셋째, 교포 기업인들의 모국에 대한 ‘투자’와 ‘공헌’에 대한 종합적인 역사적 평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나 국면에 따라 개발동맹의 전략과 관계 또한 유동적이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감안할 때, 사후적이고 결과론적인 관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은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작업은 향후의 과제로 남는다.

원고접수일: 2019년 06월 07일

심사완료일: 2019년 0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9년 06월 28일

최종원고접수일: 2019년 06월 28일

❖ Abstract

Homeland Investment by Ethnic Korean Entrepreneurs in Japan  
and the Formation of Industrial Complex in 1960's Korea:  
Focusing on the cases of Guro, Masan and Gumi

Kim, Baek Yung

This study examines core features of the ‘homeland investment’ of ethnic Korean entrepreneurs and responses of the Korean society. It is well-known that the post-colonial linkage of the Korean economy with Japanese capitalism was a major factor for the start of Korea’s export-led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in which process ethnic Korean entrepreneurs in Japan played a central role. This paper selects three major investment projects of ethnic Koreans in Japan in 1960s and analyses specific motivations, strategies and varied outcomes of the model cases: First one is Korea export industrial complex or so-called ‘Guro industrial complex’ located in Seoul-Incheon Industrial Region, and second one is Masan industrial complex located in Southeastern Maritime Industrial Region. Third one is Gumi industrial complex located in Gyeongsangbukdo province.

These three different examples of the historical makings of industrial complexes can be contrasted sharply in terms of the process of the mobilization of the ‘homeland investment’ of ethnic Korean entrepreneur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ethnic Korean entrepreneurs, local society and central government.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hree cases, this study reveals not only the motivations and strategies of homeland investment by ethnic Korean entrepreneurs but addresses the socio-cultural results and impacts of the ‘homeland investment’ of ethnic Korean entrepreneurs on Korean society of the 1960s.

Keywords: ethnic Koreans in Japan, ethnic Korean entrepreneurs, homeland investment,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al state

## 참고문헌

-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강상중·현무암·이목·옴김. 2012.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서울: 책과함께.  
 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龜尾工團二十年史』. 대구: 구미수출산업공단.  
 국토개발연구원. 1996. 『국토50년: 21세기를 향한 회고와 전망』. 서울: 서울프레스.  
 권혁태. 2007.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한국사회는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표상’해 왔는가」. 《역사비평》 78, 234-267.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2008. 『박정희 정부의 선택: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서울: 후마니타스.  
 김인덕. 2014.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과 구로공단-해방 이후 재일동포의 국내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숭실사학》 32.  
 김현규. 2012. 『공업도시 50년 ‘촌락’에서 ‘산업수도’로』(울산학연구보고서). 울산발전연구원.  
 김형아 지음·신명주 옴김. 2005.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서울: 일조각.  
 나가노 신이치로(長野愼一郎) 엮음. 2010.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일한국기업인』. 서울: 말글빛남.  
 나가노 신이치로. 2009. 『상호의존의 한일경제관계』. 서울: 이른아침.  
 류상영. 2003. 「한국의 경제개발과 1960년대 한일 경제관계: 민간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2), 291~318쪽.  
 박기주 외. 2014. 『한국 중화학공업화와 사회의 변화』.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박배균·김동완 엮음. 2013. 『국가와 지역: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서울: 알트.  
 박배균·장세훈·김동완 엮음. 2014. 『산업경관의 탄생』. 서울: 알트.  
 박배균·최영진. 2014. 「마산수출자유지역의 형성을 둘러싼 국가-지방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9(2), 113~138쪽.  
 박영구. 2015.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공업별 연구: 제1차 금속공업/기계공업』. 서울: 해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1997. 『九老區誌』. 서울: 구로구.  
 손정원. 2006. 「개발국가의 공간적 차원에 관한 연구: 1970년대 한국의 경험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25, 41~79쪽.  
 오원철. 2006.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서울: 동서문화사.  
 왕혜숙·김준수. 2015. 「한국의 발전국가와 정체성의 정치: 박정희 시기 재일교포 기업인들의 민족주의 담론과 인정투쟁」. 《경제와 사회》 107, 244~286쪽.

- 이병천 엮음. 2003.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서울: 창비.
- 이상철. 2008.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초기 발전 과정』. 《경제발전연구》 14(2), 51~90쪽.
- \_\_\_\_\_. 2012. 『수출산업단지의 형성과 변모-구로공단(1963~1987년)』. 《동향과 전망》 85, 223~263쪽.
- 이원만. 1977. 『나의 政經五十年』. 서울: 코오롱20년사편찬위원회.
- 이헌창. 2016. 『한국경제통사(제7판)』. 서울: 해남.
- 장세훈. 2014. 『구로 수출산업공단 조성의 재해석』. 《대한지리학회지》 49(2), 160~177.
-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 2008. 『모국을 향한 재일동포의 100년 족적』. 서울: 재외동포재단.
- 전국경제인연합회40년사편찬위원회. 2001. 『全經聯四十年史 上卷』.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 조석곤 엮음. 2005.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서울: 한울아카데미.
- 최영진. 2014.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창원공단 설립 전사(前史)』. 《대한지리학회지》 49(2), 178~199쪽.
- \_\_\_\_\_. 2015. 『한국 중화학공업화의 지리-정치경제학적 연구: 현대조선과 창원공단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상산업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97. 『馬山輸出自由地域 二十五年史』. 경남: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 허정도. 2005. 『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 일제강점기의 마산』. 서울: 신서원.
- 황진태·박배균. 2014. 『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 1969-73년 구미공단 제1단지 조성과정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1), 1~27쪽.
- 安倍誠·金都亨 編. 2015. 『日韓關係史 1965-2015 II 經濟』.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在日韓國人商工會連合會. 1982. 『韓商連20年史 1961~1982年』. 東京: 在日韓國人商工會連合會.